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

제 목 :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

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을 주요내용으로 한 「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」를 일부 개정하여 '11. 1. 1일부터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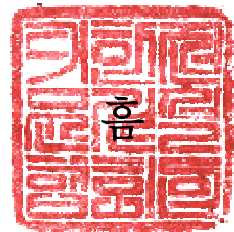
다 음

□ 주요 개정 내용

-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
 -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: 2배 → 3배
 -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: 4배 → 5배
- 현금성결제우수업체 및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합리화
- 기술자료 탈취·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

- 붙임 1.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.
2.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전문 1부.(KOSCA Net 참조)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회 장 박 덕



수신처 시·도회 회장, 업종별협의회 회장

담당자 주임 김성미, 부장 김문중

시행 : 경영지원 제 20 호 (2011. 1. 6)

우 156-01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-70(전문건설회관 17층) / <http://www.kosca.or.kr>

담당자 전화번호 02-3284-1088 전송(팩스)번호 02-3284-1091 / 전자우편 prettymi@kosca.or.kr

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

(’10. 12. 31 개정, ’11. 1. 1 시행)

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

-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의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고
 -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
- ※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①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기본과징금을 정하고 ②법위반 전력 등에 따른 가중,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른 감경을 통해 조정과징금을 산정한 후 ③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
- 동반성장 대책(9.29.) 포함사항으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여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

② 현금성결제우수업체 및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합리화

-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 폐지
 -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 축소
 - 3대 가이드라인* 사용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을 가이드라인 당 20%에서 5%로 축소
- * 3대 가이드라인 :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「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」, 「협력업체 선정·운용 가이드라인」, 「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가이드라인」
-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점감경과 과징금 감경에 중복적으로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
 - 별점은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, 과징금 가중,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등의 기준이 되므로 별점 감경만으로도 상당한 인센티브가 됨

③ 기술자료 탈취·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

-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기술자료 탈취·유용행위에 대해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 필요